F1 등 지역현안 당 차원 지원 촉구

전남 국회의원들, 어제 정세균 대표 만나 입장 전달

무소속 이윤석·강운태 의원 복당 의견 제시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과 12일 연쇄 회동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계획 등 지역 현안 문제와 무소속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1일 정세균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남지역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이른바 'MB 법안' 저지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F1 지원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F1 지원법의 경우,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회동에서 올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 문제 및 공천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문제에 대해 전남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류가 형성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남지역 의원들은 무소속의 이윤석 의원과 강운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남지역 의원들은 두 의원의 복당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정세균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특히, 전남지역 의원들은 무소속 이석형 함평군수의 복당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제한 규정에 걸리는 이 군수는 내년에 치러질 전남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12일 오찬 회동에서 전남지역 의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선도 산업 및 선도 프로젝트 조정을 통해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용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은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안을 수용한데다 여대야소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시행령에 5+3 광역경제권 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의 선도 산업 및 선도 프로젝트 조정 과정에서 광주시와는 달리, 전남도가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은 "일단 11일 회동에서는 4월 재선거 공천, 무소속 의원 및 자치단체장 복당 문제, 지역 현안 법안 등이 주요 화제로 거론될 것"이라며 "12일 오찬 회동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광주지역 야4당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용산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MB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폭력시위 극단적 결과" "MB식 밀어붙이기 때문"

■ 여야 '용산참사' 대정부질문 격돌

여야는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반(反)국가세력의 불법폭력 시위'의 극단적 결과라며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참사의 본질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권은 이번 검찰수사 등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다.

◇한나라당=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주도로 이뤄진 과격 불법폭력 시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용산지역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의 이인기 의원은 "이번 참사는 농성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시너를 뿌린 뒤, 망루 4층에서 시너가 뿌려져 있는 3층 계단으로 화염병을 던져 발생했다"며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용산 철거민들을 알카에다에 비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냉철한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혔다"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위기였다.

신지호 의원은 "법적 책임이 없는 경찰에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김 청장의 사퇴는 야권의 공세둔화라는 단기적 정치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찰 사기와 조직 안정성을 저해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참사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김종률 의원은 "철거민들의 연합단체인 전철연이 회원인 철거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 전철연 배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정치적 마타도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가 설연휴를 전후해서 용산 참사 파문을 막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수사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경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파·부실수사로, 국민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민 희생자 5명을 죽인 가해자는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4월 재보선 외부인사 영입 하나

주류측 "참신한 인사 공천으로 승리 이끌어야"

전주 정세현·윤영관·유종일 등 후보군 거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4·29 재보선 출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외부인사 영입론이 거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주류 측에서 개혁공천을 기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 인사를 공천, 재보선 승리를 이끌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전주의 경우 정 전 장관의 최종 결심과 한광옥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다양한 외부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의 텃밭인 만큼 어느 지역보다 유력한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관료 출신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유재만 변호사,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동생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외에도 85년 미 문화원 점거사건에 연루됐던 홍성영씨와 현재 한 방송사의 앵커를 맡고 있는 전북 출신의 신모씨,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 부평을의 경우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과 홍미영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 투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부인사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박호군 전 인천대 총장, 17대 국회에서 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최용규 전 의원을 비롯해 제물포고 출신의 대기업 사장, 방송계 인사 등 이름이 나온다.

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손학규 전 대표의 투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 경주의 경우 유시민 의원의 친누나이자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유시춘씨의 출마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전주 출마 정도 정치 아니다"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당 386 의원 리더격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 재보선 출마 논란과 관련, "당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로, 현재 맡은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정도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정도의 길은 아니다"라며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모든 지역 위원장들이, 어려운 지역 위원장들이 누가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김석기 후임' 내주초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후임을 내주 초께 임명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의 사표를 12일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내정자 후임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을 감안한 정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주 초나 돼야 될 것 같다"면서 "치안정감 이상은 모두 다 후임 인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 이상으로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내정자, 강희락 해양경찰청장, 이길범 경찰청 차장, 김정식 경찰대학장 등 5명이며 이 가운데 조, 강 청장과 주 서울청장내정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석기 내정자의 사표 수리 시점과 관련, "12일쯤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